

사표는 없애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

일시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문의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 02-725-7104 (참여연대
이지현 팀장, 이선미 간사)

프로그램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11:00-11:40)

- 개회
- 공동대표 인사
- 발표 1 : 국회의원 선거, 사표 및 불비례성 현황
- 발표 2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
- 발표 3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영·호남 시민단체 참가자의 정치개혁 호소 발언
- 발족 선언문 낭독

목차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결성 경과	4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	6
3. 사업계획	13
4. 조직구성 (대표자, 집행위원 등)	16
5. 발족 선언문	20
<자료1> 국회의원 선거, 사표와 지지-의석 간 불비례성 현황	22
<자료2> 참여단체 명단	30

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결성 경과

■ 2015년 6월 1일,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을 위한 전국회의 제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¹⁾가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 전국회의’ 개최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함.

■ 2015년 6월 17일,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 1차 전국회의’

-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 1차 전국회의’(장소 :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를 열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함. 차기회의에서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연대기구 구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 2015년 6월 30일,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 및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 2차 전국회의’

- 전국 174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2015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정치개혁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세부 과제(총 16개)를 국회에 제안함.
- 기자회견 직후,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 2차 전국회의’(장소 : 서울NPO지원센터)를 열고, 정치개혁운동을 위한 전국 규모의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 2015년 7월 16일,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 3차 전국회의’

1) 공동운영위원장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며, 위원은 한국YMCA 전국연맹 이필구 정책국장, 홍사단 문성근 정책실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좌세준 변호사,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사무처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임(2015.8.25. 현재)

- '정치개혁 관련 공동행동 기획 3차 전국회의를 (장소 : 서울 NPO지원센터) 열고, 연대기구의 위상과 조직구성,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초벌 논의함. <(가칭)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가칭)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참여를 제안하기로 결정함.

■ 2015년 8월 11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준) 1차 워크숍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준) 1차 워크숍(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을 열고, 연대기구의 슬로건, 핵심 입법과제, 사업계획, 발족 기자회견 진행안 등을 논의함. 8/25에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결정함.

■ 2015년 8월 24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준) 2차 워크숍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준) 2차 워크숍(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을 열고, 연대기구의 슬로건, 핵심 입법과제, 사업계획, 조직구성을 확정함.

※ 전국회의 참여단체 (3번의 전국회의, 2번의 워크숍에 참석한 단체 명단)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당진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참여자치21,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대구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비례대표제포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홍사단, KYC

※ 발족 전까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명의로 활동하기로 하여, 논평 3회 발표, 기자회견 1회 개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진행함.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의원 수 늘리고, 비례대표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 (3대 방향 17개 주요과제)

방향 1.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됨.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의 표가 사표가 되었음.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별로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총 의석 300석 중 54석에 불과해 효과를 내기 어려움.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고, 버려지는 표를 줄이고, 지역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함.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1:1인 혼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최소 2:1이 넘지 않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함.

②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의원 정수 기준 법제화

: 의원정수 최소 360명,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5천명 미만

- 국회의원 정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약 30년이 지났으나 300명을 넘지 못하고 거의 고정되어 있음. 그 사이에 행정부는 거대해지고, 인구도 거의 1천만명 정도 늘어났음. 그만큼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인구의 팽창과 사회의 변화발전에 맞추어 늘어나고 있는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있음.
- 국회 기능 충실화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며, 비례대표의 대폭 확대를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함.
-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선거 때마다 국회에서 편의에 따라 정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국회의원 정수는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에 명시해 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제헌의회 사례(의원 1인당 10만 명 대표)부터 외국 선진 의회의 사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1988년 총선의 경우에 해당하는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인구 규모에 적용하면 감안해보면 의원 정수는 360명이 도출됨
- 따라서 의원 정수는 최소 360명이며,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14만 5천명을 넘지 않도록 함.
- 단, 의원 정수 확대와 병행하여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 및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예산지출내역에 대한 투명성 강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함.

③ 비례대표 의석 100석 이상 확대

-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을 완화하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이 제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지역구의 최소 2:1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함.

④ 선거구간 인구 편차 조정으로 약화되는 지역 대표성 보완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허용 기준을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놓여온 지역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4개 자치구·시·군을 초과해 하나의 선거구를 마련할 수 없다'는 확정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방향 2 정치 독점 구조를 깨자!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은 정치발전의 자양분임. 그러나 우리 정치제도는 선거와 정당 지원, 국회 운영 등에서 기성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너무 유리해 균형을 잃은 제도임. 또 이는 기득권을 확보한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를 장기간 독과점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유지, 대물림하기 위한 현행의 정치 제도를 개혁해 새로운 세력과 기성 세력 간의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⑤ 각 정당의 민주적인 공천 실행 약속

- 정당의 공천이 밀실 공천, 계파 공천이라고 불리면서 선거 때마다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각 정당은 공천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비롯해 민주적인 공천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함.

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19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은 전체 의원 중 15.6%(47명)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남녀 교호순번제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별칙조항을 신설해야 함.

⑦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을 두어야하고 전국 5개 광역시·도에 시·도당 등을 두어야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시민의 정당 결성과 정당 활동 같은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해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바탕을 둔 정당 등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⑧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각종 회의의 의사일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교섭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국회 운영에 대한 소수의견 반영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야 함.

⑨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일뿐인데,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될 이유는 없음.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함.

⑩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 지방 정치인 후원금 모금 허용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함. 또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하향 조정 및 세분화하여 지지를

에 따라 선거비용을 차등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해야 함.

방향 3.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자!

시민들은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운영과 입법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거 당일에만 주권자이고 일상적으로는 구경꾼같이 선거와 정치, 국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음.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키우고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다양한 시민들이 여러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자신의 대표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주사회의 기본임.

⑪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국민주권의 이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음.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함.

⑫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및 투표시간 밤 9시까지 연장

-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 국가의 의무임. 선거 때마다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유권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

되고 있고,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회 안팎에서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

- 투표율과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재자투표와 거소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하고 있어 투표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었던 주요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전투표소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해야 함.

⑬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함. 온라인상의 후보자 비판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상의 규제는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별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상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⑭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임.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음.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직군을 제외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야 함.

⑮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및 공간 개방

-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회의를 방청하는 것은 국회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방청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신고제로 바꿔야 함. 또 국회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도 폐지하고, 국회의 사당 정문으로 시민은 출입할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국회 공간 출입 규정도 개선해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 바꾸어야 함.

⑩ 국회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 공개 확대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이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임. 따라서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회는 스스로 예산 운영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⑪ 국회 청원제도 개선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절차상 국회의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함. 온라인 청원제도와 청원 지원시스템 마련, 청원인의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청원안의 심사기한 준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청원제도를 개선해야 함.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5대 역점 과제

1.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2.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3.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5.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30%는 여성 공천 의무화

3. 사업계획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안 등을 심의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 국회가 이를 확정하는 11월 13일까지를 1차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집중하고자 함. 11월 13일 이후부터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2차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

1) 유권자의 공론장 형성 및 국민 의견 모으기

○ 시민에게 듣는다 : 바람직한 국회의원 수, 비례대표 수에 대해 진짜 국민 의견 조사 진행

- 인구학적 기준에 따라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아,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바람직한 국회의원 수와 결정기준, 비례대표 수 등 정치개혁 쟁점에 대한 공론조사 진행해 발표.

○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전국 순회 시민 원탁토론 개최

- 시민들이 정치개혁 방안을 직접 토론하는 시민원탁토론 개최. 시도광역별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지역/그룹별로 진행
- 토론은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얼마가 적당한가?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로 진행.
- 10월 말까지 광역시도로 최소 1회씩 개최함.

○ 전국 릴레이 유권자 대화마당 개최

- 9월부터 연말까지, 미니 특강이 포함된 유권자들의 대화 모임, (가칭) ‘유권자 대화마당 - 유권자의 눈으로 본 선거제도’를 전국 순회 방식으로 개최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250여개 단체에서 최소 각 1회씩 개최

2) 국회 공익 로비 활동

○ 10월, 버려진 표들의 행진, 정치개혁 만민공동회 추진

- 정기국회 중에 국회 앞에서 버려진 표들의 행진, '정치개혁 만민공동회' 개최
- 국회의장과 의원들을 초청해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밝히고, 입법 촉구

○ 의원 사무소 앞 혹은 주요 거점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 국회 시민로비단 결성해 300명 국회의원 맨투맨 입법 로비

-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로비단을 결성함.
- 국회 정치개혁특위 방청 신청, 국회의원실에 전화 로비 등 진행

○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장 전달/입법촉구

- 각 정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면담 요청
- 광역시도는 시도당, 지역구 의원, 당협위원장 등을 상대로, 부문은 각 정당 정책위의장이나 부문위원회를 상대로 우리의 정치개혁방안을 전달하고, 입법을 촉구함.

3) 시민 홍보 활동

○ 추석맞이, 전국 유권자 100만 명 만나기

- 선거제도 개혁이 추석 밥상의 이야기 주제가 되도록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 진행

○ ‘정치를 바꾸자! 선거를 바꾸자!’ 캠페인 데이

- 9/1, 9/15, 10/1, 10/15, 11/1을 시민 캠페인의 날로 정해 전국 동시다발로 광역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전시물 게시, 홍보물 배포

○ 전문가 릴레이 기고

- 비례대표 확대하고 정치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 원로, 전문가, 저명인사, 파워블로거 등의 릴레이 언론 기고 및 기고글 국회의원에게 보내기

○ 의원 수 늘리면 정치가 나아진다고?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치개혁 쟁점 Q&A’ 발표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들이 유권자에게 득이 되는지 아닌지 소개하고, 오해와 진실도 명쾌하게 해설해주는 홍보 콘텐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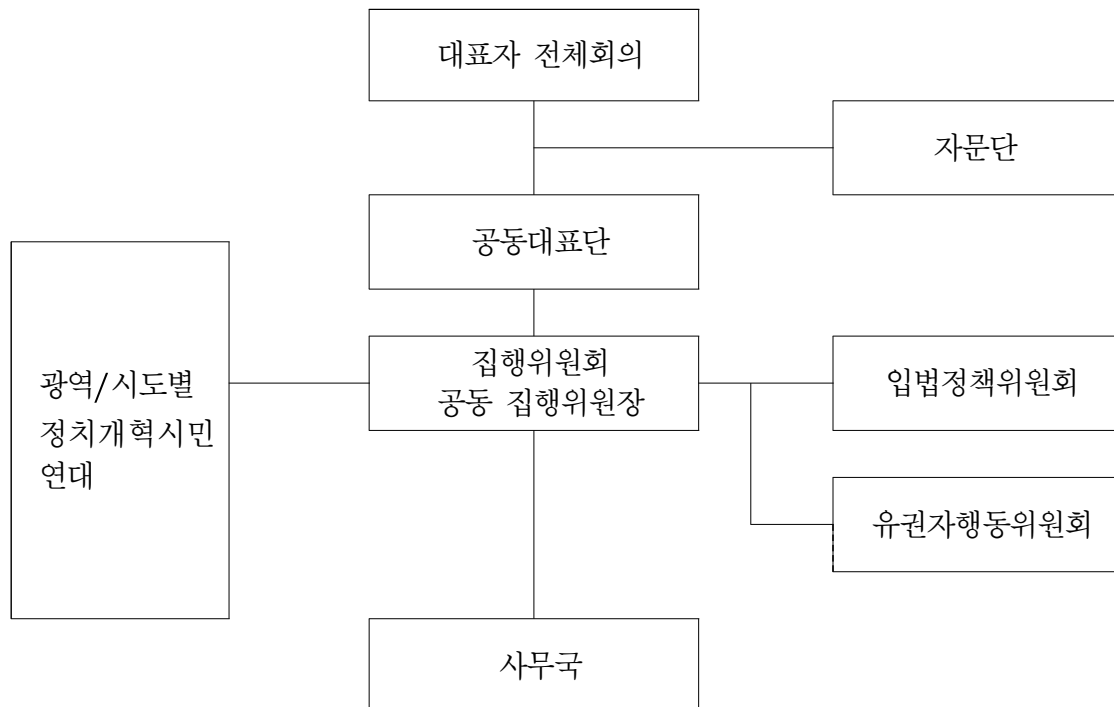
○ ‘선거제도 이렇게 바뀌요’ 핸드북 발간

- 정치개혁 과제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하는, 그림과 그래프가 있는 핸드북 발간 및 전국 배포

○ 인기 팟캐스트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동 기획 추진

4. 조직구성

1) 조직 구성과 체계 및 인선안



① 공동대표 (8월 24일 기준, 무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 유경희 녹색연합 대표

- 박석운 민주언론운동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KYC 공동대표
-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 강원,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시도별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추가 인선 예정

② 집행위원회 (8월 24일 기준, 무순)

- 공동 집행위원장 :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 집행위원장 약간 명 추가 인선 예정
- 집행위원
서복경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치학 박사, 참여연대 임원)
좌세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
개혁TF 공동팀장)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상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태성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역, 부문을 대표하는 집행위원 추가 인선 예정

③ 광역/시도별 정치개혁시민연대

- 강원,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광역시도에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구성

④ 입법정책위원회

- 정치개혁 과제 홍보, 시민교육, 강연, 연구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 입법정책위원회
 - 공동위원장 : 서복경(참여연대 임원,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좌세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위원 : 강우진(경북대 교수), 김형철(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유성진(이화여대 교수), 이소영(대구대 교수), 장선화(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정하운(정치학 박사), 홍재우(인제대 교수), 송기호(변호사), 신장식(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성창익(변호사)
 - 각 부문, 광역시도별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단체 전문가 추가 인선 예정

⑤ 유권자행동위원회(시민로비단)

- 국회 공익로비 추진,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시민참여 캠페인 등 기획, 실행

⑥ 자문단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 뜻을 같이 하는 전문가, 사회 원로, 저명인사, 파워블로거 등으로 자문단 위촉

⑦ 사무국

- 사업 기획 및 집행, 조직, 홍보 등 담당
- 연락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5. 발족선언문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에서 시작한 2000년대 전반기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정치부패 근절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어진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시민정치개혁운동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참정권 확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이 같은 시민정치개혁운동은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둔 올해 국회가 이들 미완의 개혁과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치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정치개혁 과제 17개를 선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국회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자, 전국적인 시민정치개혁운동 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제안하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가며 범국민적 여론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 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로 구성될 제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회가 되도록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할 것입니다.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8. 25.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일동

<자료1> 국회의원 선거 사표 현황과 지지-의식 간 불비례성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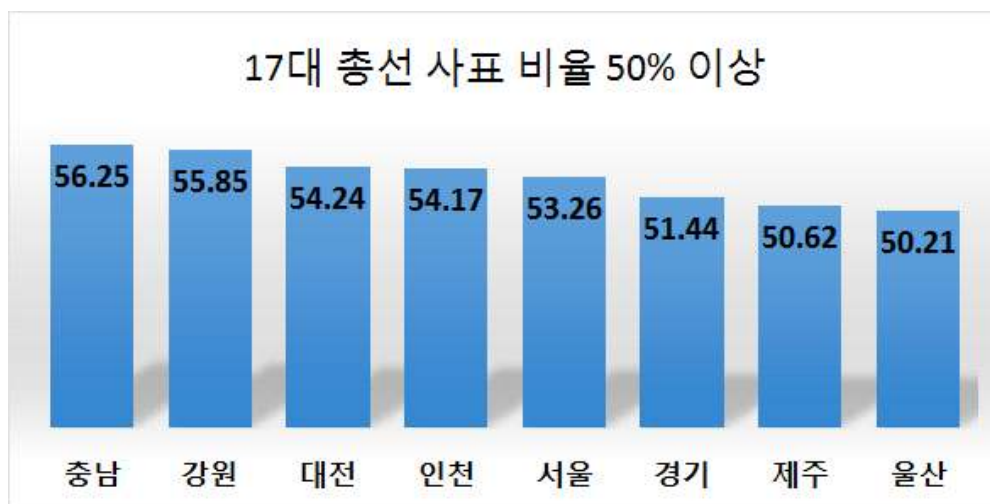
[표 1] 17대 총선 ~ 19대 총선 투표수 및 사표 현황



	투표수	사표	사표 비율(%)
17대 총선	21,263,745	10,629,856	49.99
18대 총선	17,212,690	8,105,059	47.09
19대 총선	21,792,851	10,120,550	46.44

2) 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2] 17대 총선 지역별 투표수 및 사표 현황



	투표수	사표	사표 비율(%)
충남	780,517	439,060	56.25
강원	668,095	373,126	55.85
대전	598,358	324,551	54.24
인천	1,050,236	568,883	54.17
서울	4,776,870	2,544,090	53.26
경기	4,330,231	2,227,487	51.44
제주	237,196	120,069	50.62
울산	461,354	231,650	50.21
경남	1,398,804	695,237	49.7
충북	625,761	310,063	49.55
전남	934,821	450,259	48.17
경북	1,162,148	554,274	47.69
부산	1,711,418	810,541	47.36
광주	585,716	269,382	45.99
대구	1,088,038	408,663	37.56
전북	854,182	302,521	35.42
합계	21,263,745	10,629,856	

[표 3] 18대 총선 지역별 투표수 및 사표 현황



	투표수	사표	사표 비율 %
제주	219,505	127,773	58.21
대전	495,725	282,817	57.05
충북	562,852	308,044	54.73
인천	849,785	435,556	51.25
강원	594,006	299,522	50.42
충남	735,371	370,593	50.4
경기	3,594,746	1,788,482	49.75
서울	3,668,085	1,789,825	48.79
경남	1,155,147	554,256	47.98
부산	1,201,183	551,387	45.9
울산	367,268	162,669	44.29
전북	663,933	279,914	42.16
경북	1,094,026	455,708	41.65
전남	735,151	261,455	35.56
광주	434,557	153,375	35.29
대구	841,350	283,683	33.72
합계	17,212,690	8,105,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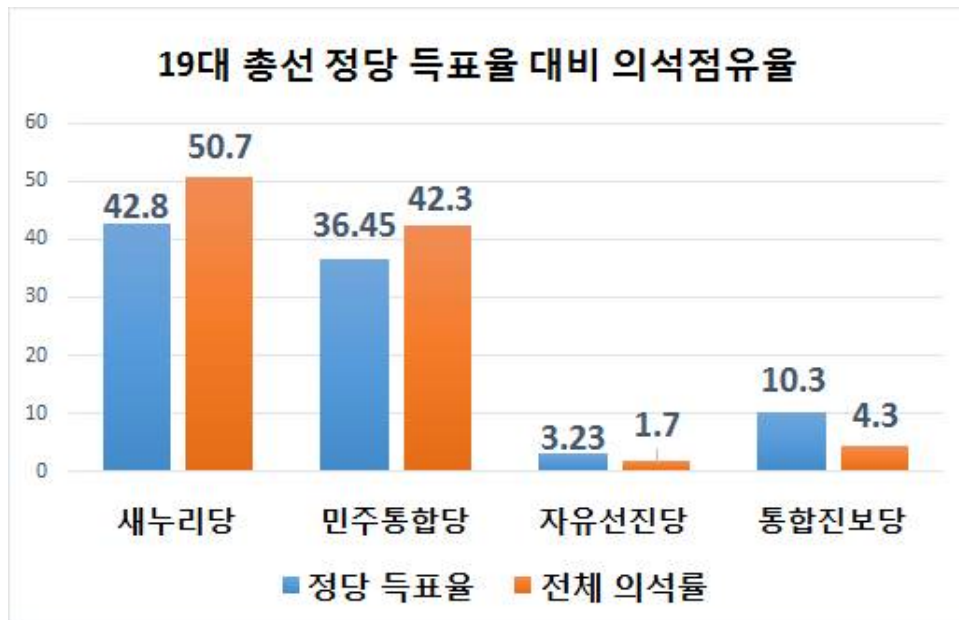
[표 4] 19대 총선 지역별 투표수 및 사표 현황



	투표수	사표	사표 비율 %
충남	832,051	450,969	54.2
대전	635,855	338,926	53.3
세종	47,388	24,157	50.98
제주	241,167	120,558	49.99
인천	1,134,365	549,154	48.41
부산	1,585,471	759,605	47.91
경기	4,858,893	2,302,412	47.39
서울	4,649,579	2,200,539	47.33
경남	1,477,622	697,624	47.21
충북	667,290	311,261	46.65
강원	683,783	318,900	46.64
전북	791,364	363,010	45.87
울산	486,601	220,353	45.28
광주	584,096	238,338	40.8
전남	865,454	344,298	39.78
대구	1,035,304	406,050	39.22
경북	1,216,568	474,396	38.99
합계	17,212,690	8,105,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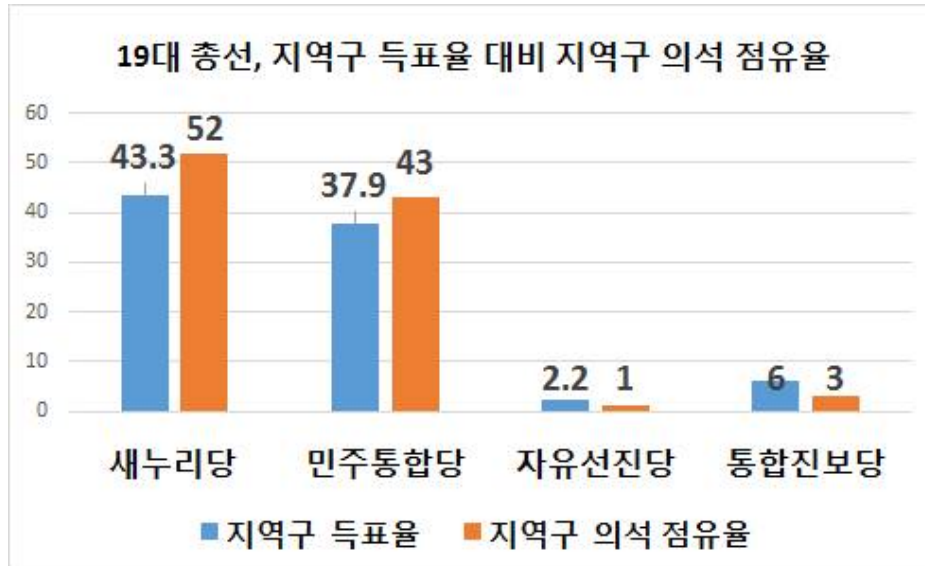
[표 5] 19대 총선, 득표율과 의석률 현황

1) 19대 총선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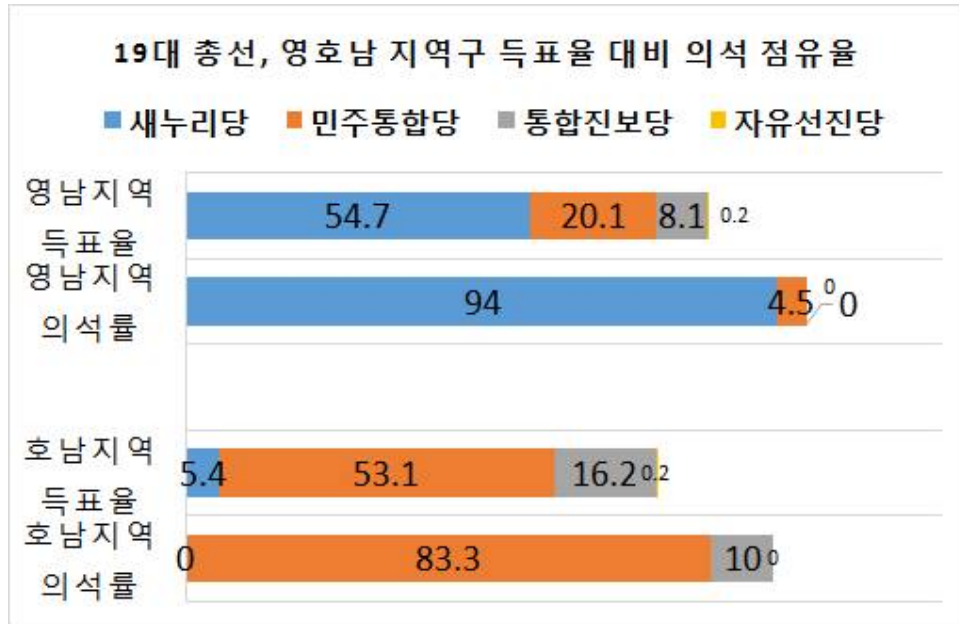
	정당 득표율	의석점유율
새누리당	42.8	50.7
민주통합당	36.45	42.3
자유선진당	3.23	1.7
통합진보당	10.30	4.3

2) 19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점유율 (%)



	지역구 득표율	지역구 의석 점유율	각 정당 지역구 의석수
새누리당	43.3	52.0	127
민주통합당	37.9	43.0	106
자유선진당	2.2	1.0	3
통합진보당	6.0	3.0	7

3) 19대 총선, 영호남 지역구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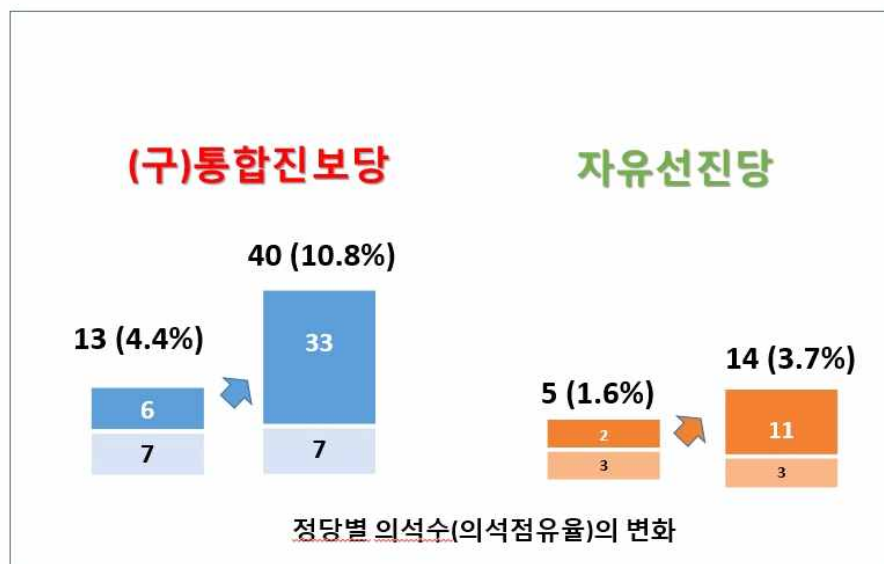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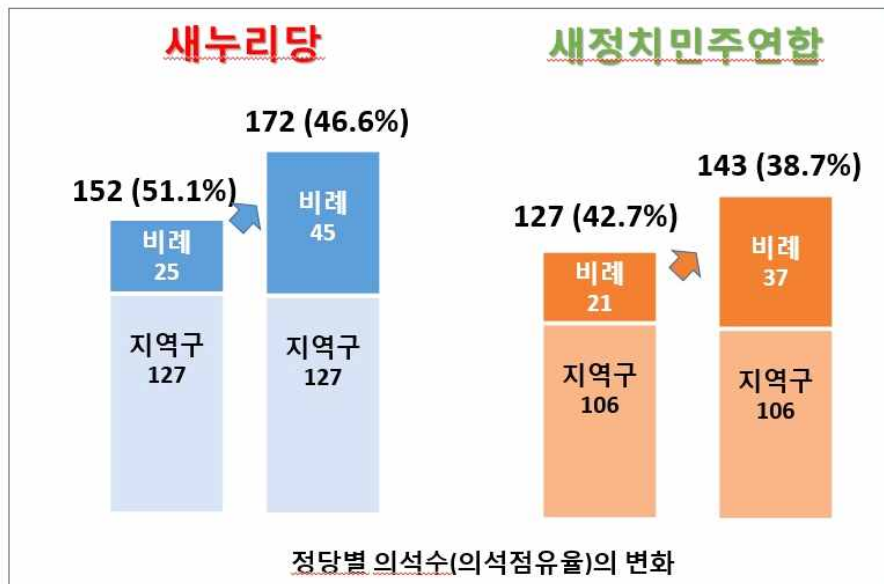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호남 지역구 득표율	5.4	53.1	16.2	0.2
호남 지역구 의석 점유율	0	83.3	10	0

영남 지역구 득표율	54.7	20.1	8.1	0.2
영남 지역구 의석 점유율	94	4.5	0	0

[표 6] 19대 총선 결과에 '의원 369명(지역 243 / 비례 126)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물레이션

19대 총선 결과에 '의원 369명(지역 243/ 비례 126) +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시물레이션



출처 : 중앙일보 2015. 7. 30. '의원 369명 + 권역별 비례' 도입해보니 여당 과반 붕괴

<자료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명단 (2015년 8월 24일 기준, 총 249개)

[강원] - 25개

강릉경실련 강원민예총 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릉YMCA 광산지역사회연구소 광산지역환경연구소 동강보존본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YMCA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YMCA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 - 16개

(사)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남] - 23개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실련 거제YMCA 거창YMCA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광주] - 17개

광주민예총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참여자치21

[대구] - 17개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구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
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북구여성
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 - 19개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
지역대학생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
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민주민생대전행동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홍사단대전지부

[부산] - 5개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
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서울] - 21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례대표제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치발전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홍사단 KYC

[울산] - 12개

민주와노동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
산YWCA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인천] - 8개

노동자교육기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남] - 24개

(사)목포포럼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나주사랑시민회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순천YMCA 순천YWCA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KYC 진도사랑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 SHR녹색

[전북] - 9개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충남] - 26개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YMCA 보령참여시민연대 복지 세상을열어가는데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재단 충남참여자치운동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충북] - 27개

(사)사람과경제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충북민예총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일하는공동체 청

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충북지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
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홍사단충북지부

※ 참가단체 계속 확대 중